"기업들, 해외로 떠날 것" vs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재계·여당〉 〈노조측〉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왼쪽 세번째)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 찬반 논란

경제6단체 '거부권 행사' 기자회견
"노사분규 확대, 기업·경제 무너져
통과땐 기업 정상적사업 어려워"
산업별로도 개별성명서 준비중

민노총·한노총 '공포촉구' 회견
"부진정 연대책임 막는데 큰 의미
거부권, 위헌·집행불가때만 가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재계가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노동조합 쟁의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국내에서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는 이유다. 노조측에서는 노동자 권리를 찾는 조치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힘을 실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그 밖에 여당 의원들도 거부권 행사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 재계 대통령에 거부권 요구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제6단체를 대표해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함께했다.

경제6단체는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노사 분규가 확대되면서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고, 결국 거래 단절과 사업장 해외 이전으로 미래세대 일자리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요구는 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손 회장은 15일 산업별로도 개별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에도 법안 무력화를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가장 먼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산업이 대기업을 원청으로 다양한 협력사와 함께 운영되는 상황, 협력사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분쟁을 멈추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미 여러 원청 기업들이 협력사 노조와 단체 교섭 가능 여부를 가리는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대우조선해양 등이다. 일단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노조법이 개정되면 패소가 유력시된다.

이들 기업이 원청과 단체교섭권을 얻게 되면 다른 노조에서도 원청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재계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면서 쟁의 행위가 더욱 폭력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장을 파괴하거나 점령하는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게된다는 것. 손해배상 청구권이 극단적인 쟁의 활동으로 협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적으로나마 대화 창구를 여는 기능도 컸던 만큼, 오히려 합의 기회를 뺏는다는 시각도 있다.

◆노조 "헌법 권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라며 맞섰다.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노조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노조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손배 소송으로 분신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옛 노동자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도 안정적인 교섭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의미라며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도 내세웠다. 거부권은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개정안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비정규직 권리 확보에도 힘을 실었다.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에 노조법 개정안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특수 고용 노동자도 나섰다. 엘지하이엠솔루션에 소속된 LG케어솔루션지회와 현대자동차와 기아 대리점과 계약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 특수 고용 노동자 등이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해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와 배달플랫폼 노조 등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모든 사업, 원점서 재검토… 내부쇄신 나설 것"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모빌리티 본사서 제3차 경영회의 참석

"모든 서비스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13일 "창업자로서 많은 분들의 질책을 정말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준법과 신뢰위원회', '경영쇄신위원회'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 빠르게 내부 쇄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개최된 제3차 경영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카카오

김 센터장은 이날 홍은택 카카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개최된 3차 경영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창업자로서 많은 분의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준법신뢰위원회와 경영쇄신위원회를 통해 외부 통제도 받으며 빠르게 쇄신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기업으로 초심으로 새로운 카카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연내 쇄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쇄신 방안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묻자 "올해 말에 가시적인 방안을 내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달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제기된 카카오 택시 독과점 비판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1·2차 회의를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었던 것과 달리 이날 3차 회의 장소를 카카오모빌리티로 옮겼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카카오택시 관련 사안에 대해 창업자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오후 5시에는 카카오택시 가맹협의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행 카카오 택시 호출 및 수수료 체계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1면 '美 셧다운 가능성'서 계속

"現 주담대 금리 7.7% 연말까지 금리 오를 것"

셧다운이 발생하면, 건전성 악화 등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적자상황으로 자금조달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자금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가격은 하락하고 국채금리는 상승한다. 임시예산안은 셧다운 가능성이 지연된 것일 뿐 여전히 잠재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채 금리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韓 주담대 금리 8% 가능성

문제는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전세계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고, 다른 국가들은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영향을 받는 은행채 등 금리가 상승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국내 채권 중 장기물 금리가 미국 국채금리와 동조화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고정)금리의 상단은 연6.41%, 변동금리 상단은 연 7.7%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픽스 등 은행의 대출기준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산금리, 조정금리가 그대로라도 대출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연말까지 대출금리 상승은 이어질 것"고 전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상속체계, 명목세율 높고 실질적 부담도 상당"

추경호 부총리 기재위 전체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사진)가 13일 국내 상속세 체계에 대해 "명목세율도 높고 실질적인 부담도 상당히 높다"라는 견해를 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명목 최고세율이 제일 높다는 말은 맞지만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라는 표현은 틀렸다'라고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상속세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소득세를 스웨덴만큼 걷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의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

다드에 맞지 않게 어떤 세목은 과다하게 높고 어떤 세목은 낮고, 또 국민 각자의 이해가 있다"라며 "현행 체계가 다소 간 차이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체계는 다 건드리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